코리아연구원 논평 6호 (2010년 5월 11일)
Korea National Strategy Institute

www.knsi.org/ ☎733-3348,팩스733-3358/ 100-855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86-28 우리함께회관 405호/ knsi@knsi.org

지방선거 승리할 수 있다: 아래로부터의 정치연합및지방공동정부 구성 늦지 않았다

진보개혁진영의 선거연합을 위한 '5+4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지방선거가 이명박 정권의 독주무대가 될 것이라 비관했던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상층 정당 엘리트들의 협상이 자리싸움으로 지지부진했던 그 시간 지방의 진보개혁세력들은 정책연합과 후보연합에 대한 협상을 꾸준하게 추진해왔다.

경남에서 연합후보 선정을 필두로 수도권의 불씨도 되살아나고 있다. 고양무지개연대는 고양시장 후보를 단일화했고 동시에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을 단일후보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명시에서도 후보단일화가 성사되었으며, 연이어 수원, 성남, 군포에서도 단일화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다. 더욱더 반가운 현상은 이들이 정책연대 및 공동지방정부를 운영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말 반가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1987년 민주화가 위로부터의 민주화라는 한계를 안고 출발했기에 그동안 진보개혁진영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개혁정당 엘리트들은 분열과 분열만을 거듭해왔다. 친노와 반노의 분열,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분열,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정치연합 협상에서도 자파의 이익만을 내세워 결국 서로 반목하기를 거듭하지 않았던가.

일전에 코리아연구원은 정당 상층부에 의한 정치연합 협상은 결국 엘리트 카르텔의 반복이며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봉착해 실패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그리고 대안으로 진보개혁 유권자들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정책, 기호, 후보단일화를 주문했었다. 그러나 정당 엘리트들은 '5+4 회담'에서 '지분 나눠 먹기식'의 상층협상에 골몰했었다. 결과는 자파의 유불리에 대한 계산속으로 진보신당이 먼저 탈퇴했고, 이후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은 서로에게 유리한 단일화의 규칙(룰)을 고집하다 끝내 파경에 이르고 말았다.

그러나 한국의 진보개혁진영은 어리석지 않았다. 상층 정치 엘리트들이 정파적 이익에 사로잡혀 서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기하고 있을 때, 지역의 풀뿌리 진보개혁세력은 삼삼오오 지방정치 영역에서 정책과 후보의 연대를 자발적으로 모색했다. 그러한

노력은 이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비록 지방선거가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지만 진보개혁진영의 연합정치의 모색은 늦지 않았다.

이제 무엇이 남아 있는가? 먼저, 아래로부터의 정치연합에 의한 지방연립(공동)정부 구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선 빨리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 아울러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곳에서도 지역의 시민단체와 더불어 정책 및 후보 단일화를 모색해야 한다. 한국정치의 민주화를 더 이상 몇몇 상층 정치 엘리트들에 맡겨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역으로부터 연합정치 실현을 통해 더 넓고 깊은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그 결실이 진보적 지방연립(공동)정부여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이러한 흐름이 민주화 이후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와 실질적 민주화를 구현하는 촉매제 및 추동력이 될 수 있음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이다.

둘째, 중앙의 정치 엘리트들도 이러한 지방의 민주주의 물결에 동참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5+4' 연합정치의 실패에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지역의 연합정치를 존중하고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이왕이면 공동선거운동본부를 꾸려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권고하고자 한다.

셋째, 지난 4일 민주노동당의 야권연대 실현 및 후보단일화를 위한 3당(민주노동당·민주당·진보신당) 서울시장 후보 원탁회의 제안에 주목한다. 진보개혁세력은 지금이라도 근시안적 소탐대실을 버리고, 역주행과 냉전적 퇴행을 거듭하는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전 국민적 대의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2010/05/11)

※코리아연구원(원장 박순성)은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 부문에서 정책대안 및 국가전략을 제시합니다. 전화(02-733-3348, knsi@knsi.org) 또는 홈페이지(www.knsi.org)에서 코리아연구원을 후원하실 수 있으며, 후원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